

“FTA 늘리려면 친환경농업 살려라”

전남도, 다자간 FTA시대 ‘위기의 농촌’ 대응 59개 정책 건의

전남도가 한·미, 한·EU FTA 등으로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업·농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59개의 정책과제를 발굴,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11일 건의문을 통해 “붕괴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피해 보전과 소득안정 부분에 집중된 정부의 소극적인 대책을 전환, 농업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 등 적극적인 방향으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FTA로 인한 피해보전 및 소득안정 지원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기반 확충 ▲농촌 정주·교육·복지여건 개선 등 4개 분야 59개 과제다.

우선, 피해보전 및 소득안정 지원 분야의 경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한 폐업보상 확대하는 방안, 쌀·과수 등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의 지원 기준 현실화 등 12개 과제가 선정됐다.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축산물 품질 제고를 위한 친환경 생산기반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친환경농식품 산업화단지 조성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확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등을 건의했다. 또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모화·기업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광역 쌀 유통회사 설립 및 농협회사

육성 지원 ▲발작물 수확작업 전용기계 개발·보급 및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 고유 농산물의 보호·육성을 위한 ▲유기농 막걸리 전문수출센터 건립 ▲국내산 밀 저장·유통시설 확충 ▲곤충 생태마을 조성 확대 등 모두 19개 과제가 포함됐다.

신성장동력 기반 확충 분야에는 시장 개방에 따라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전남에 농업분야 연구 및 지원기관 우선 배치해줄 것과 지역 공

동화가 우려되는데 따른 농·어촌 관광활성화 사업 확대 지원, 쌀 수급 안정 및 대규모 간척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농생명 융복합 수출단지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전문인력 육성,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농어촌 뉴타운 및 행복마을 조성 사업 지원 확대, 농·어촌 고등학생 학비·급식비 면제, 농과대 학생 학자금 감면,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등도 FTA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책으로 제시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업·농촌·농업인을 포괄하는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보완대책이 한·미, 한·EU FTA 발효 이전에 마련돼야 한다”면서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모든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독도수호특별전

이 행사는 13일까지 광주여고, 17일부터 19일까지 선명학교에서 열린다.

11일 광주여고에서 개막한 ‘찾아가는 독도 공부방, 우리 땅 독도수호특별전’에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학생들과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호남대와 시교유형이 주최한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아덴만 영웅’ 석선장 병원비 어찌나

아주대병원 1억7500만원 중간정산 요구 법정관리 상호해운측 “지급 어렵다”

‘아덴만 영웅’ 석해운 선장이 거액의 병원비 격정에 휩싸였다. 아주대병원 측은 거액의 병원비를 이틀 내 중간 정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상호해운 측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놓은 상태여서 당분간 병원비를 정산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수원 아주대병원 별관 5층에서 소말리아 해적사건 재판과 관련 증인신문을 마친 석해운 선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상호해운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1월29일 입원한 석 선장의 10일까지 병원비는 1억7500만원이다. 문제는 최근 아주대병원 측이 병원비를 중간 정산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상호해운은 당장은 병원비를 낼 수 없는 형편이다. 지난달 21일 부산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명령’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아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변제나 자산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상호해운

은 설명했다. 상호해운은 지난해 4월에는 상호해운호가, 지난 1월에는 상호주얼리호가 각각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는 바람에 엄청난 재산피해를 보는 등 큰 곤욕을 치렀다.

이렇게 되면 석 선장의 치료비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지급유예 대상이 된다고 상호해운은 말했다. 다시 말해 일정 기간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상호해운은 석 선장 치료비를 보충처리하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이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사가 규정에 따라 병원비를 먼저 지급하기 어렵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아주대병원 측은 “석 선장의 입원기간이 길어져 병원 규정에 따라 진료비 중간 정산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강제퇴원 얘기는 꺼낼 적도 없다”며 “상호해운측이 보험사와 협의해 이틀 내 지급해줄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석 선장이 두 차례 수술을 더 받아야 하고 재활치료까지 고려하면 최소 두달은 더 입원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비는 2억원을 훌쩍 넘어갈 것으로 보여서 병원비 지급을 둘러싼 상호해운과 아주대병원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이채필 장관후보자 인사청탁 돈봉투 논란

“1000만원 다음날 돌려줬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탁회를 앞두고 인사청탁성 돈봉투 수수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노동부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7월 부하 직원의 민원실 별정직 6급 김모씨가 경기도 안양시 법계역 부근에 있는 이 후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이 후보자 부인에게

현금 1000만원이 든 행정봉투를 건넸다.

이 후보자는 다음날 김씨를 총무과 장실로 불러 봉투를 되돌려 주려 했으나 사무실로 오지 않자 김씨가 근무하는 1층 민원실로 내려가 인사청탁을 하지 말라고 훈계하며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봉투를 되돌려줬다고 밝혔다.

현장을 목격했다는 민원실 여직원 김모씨는 “당시 이채필 총무과장이 민원실로 내려와 김모씨에게 ‘어제 우

리 집에 왔었느냐고 물은뒤 행정봉투를 집어던지며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크게 화를 냈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부 차관으로 재직중인 이 후보자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봉투를 건넨 사람은 김씨의 부인이 아닌 김씨 본인이었으며 제 부인이 건넨 것은 고급화장품과 현금 1000만원을 담은 한지상자가 아니라 행정봉투에 담긴 ‘과장이 보실 자료였다’며 “하를 우려한 점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벌써 기강해이? 장관들 국무회의 지각

4·27 재보선 패배 이후 여권이 쇠신 바람 속에서 어수선한 가운데 11일 오전 국무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10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국무회의가 예정된 오전 8시를 넘겨서 시작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윤

중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현인택 통일, 이귀남 법무, 김관진 국방, 유정복 농림수산식품, 진수희 보건복지, 이만의 환경, 박재완 고용노동,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만 참석했다.

하지만 예정 시각인 8시가 돼서도 김 총리를 포함, 구성원이 9명에 불과해 정족수가 부족하자 부랴부랴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측에 연락

해 장관의 참석을 재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데다 여권이 4·27 재보선 패배 이후 ‘쇄신 갈등’을 빚는 가운데 내각의 기강이 다소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곽정숙, 통계법 개정 법률안 발의

민주노동당 곽정숙(비례)의원은 11일 여성장애인 의 다중차별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매우 열악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 정책 및 여성장애인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지표 통계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장애 유무 등에 따라 구분 작성하도록 돼 있다.

한편, 곽 의원은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공동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병원 인력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연다.

광주시의회, 사회적 기업 육성 토론회

광주시의회는 11일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8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조호권(민·북구 5)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일 광주사회적기업 지원센터장(순천대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이은방(민·북구 6) 시의회 부의장, 조고의 광주지방노동청 광주 고용센터 지역 협력과장, 시청 및 사회적 기업 관계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강은미(민노·서구 4)의원과 김선호 교육의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황인국(서울 대안교육센터장), 제하림(광주 도시 속 참사자 학교장)의 발제로 진행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민정치교육 강사 모집

광주시 선관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정치교육을 담당할 우수한 외래강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정의 과정을 거쳐 선발된 강사는 초·중등학교 학생 및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유권자의 주권인식과 민주정치 발전 등에 관한 강의를 하게 된다. 자격요건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인 사람이거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년 이상 강의를 한 경력이 있거나 현재 강사로 재직중인 사람이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j.election.go.kr>)에서 지원서 등을 다운받을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59
광주일보
1962-2011

꿈과 희망의 도시 군산!

군산시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군산시의회
<http://council.gunsan.go.kr>